



##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2014.7.14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여성 고용률이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호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악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고용률 증대,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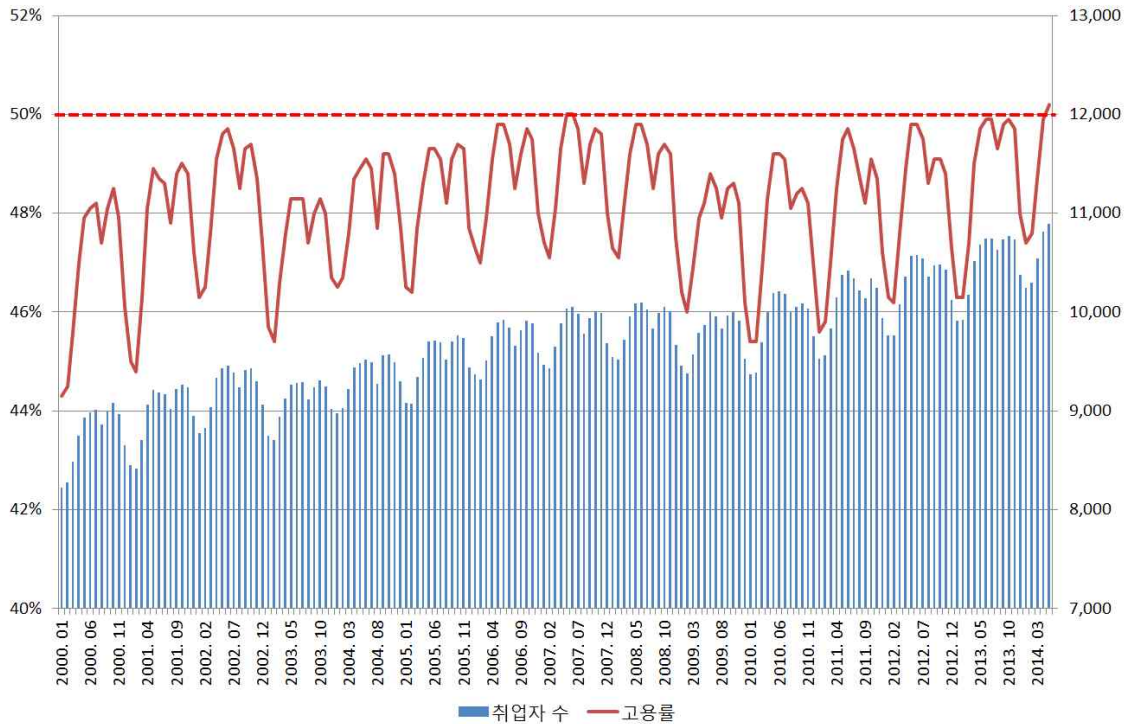
###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여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이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2천 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3%p 상승한 50.2%로 나타났다. 이번 여성 고용률 50.2%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007년 5월과 6월 각각 여성 고용률 50.0%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여성 고용률 증대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동향브리프” 6월호는 이와 같은 여성 고용률 상승에 대해 “출산·육아기의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 확대 등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남성 취업자 수 증가(20만 명)에 비해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21만 2천 명)가 더욱 두드러졌던 점도 이와 같이 정부의 여성 취업자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그림 1]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 천명)



※ 고용률은 좌측 축, 취업자 수는 우측 축 참조

여성 고용률 증대, 여성 취업자 수의 양적 확대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 육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만들고 시행하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고용률 증대와 이를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 고용률 증대에 대한 환호는 크지 않다. 이는 현 정부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여성 고용률 증대가 노동시장 내 좋지 않은 일자리 확대를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여성 고용률 상승, 여성 취업자 수 증가라는 양적 측면의 수치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이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적 측면 악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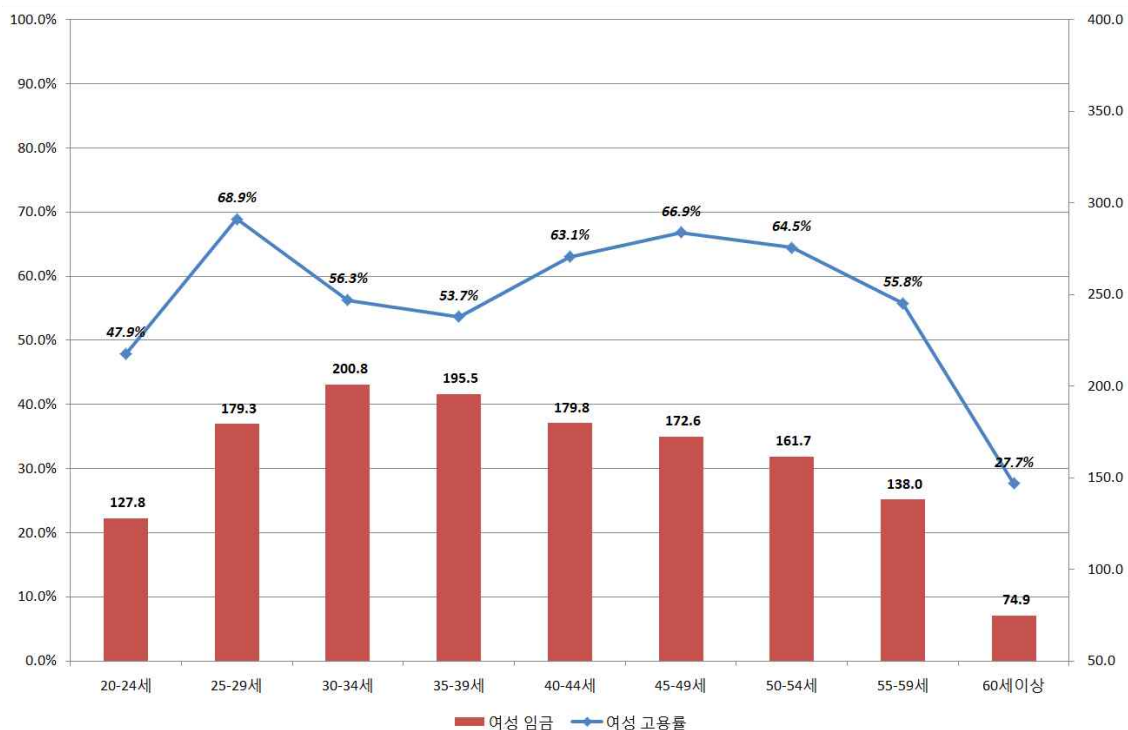


### 노동시장 내 여성 노동자들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들

이런 우려들은 우선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고용환경 측면에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61.2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1만 원의 59.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는 현실은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의 반영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50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동일 연령대 남성들에 비해 150만 원이나 임금이 낮아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심했으며 20대 후반이나 30대 여성들에 비해서도 임금이 훨씬 낮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란 우려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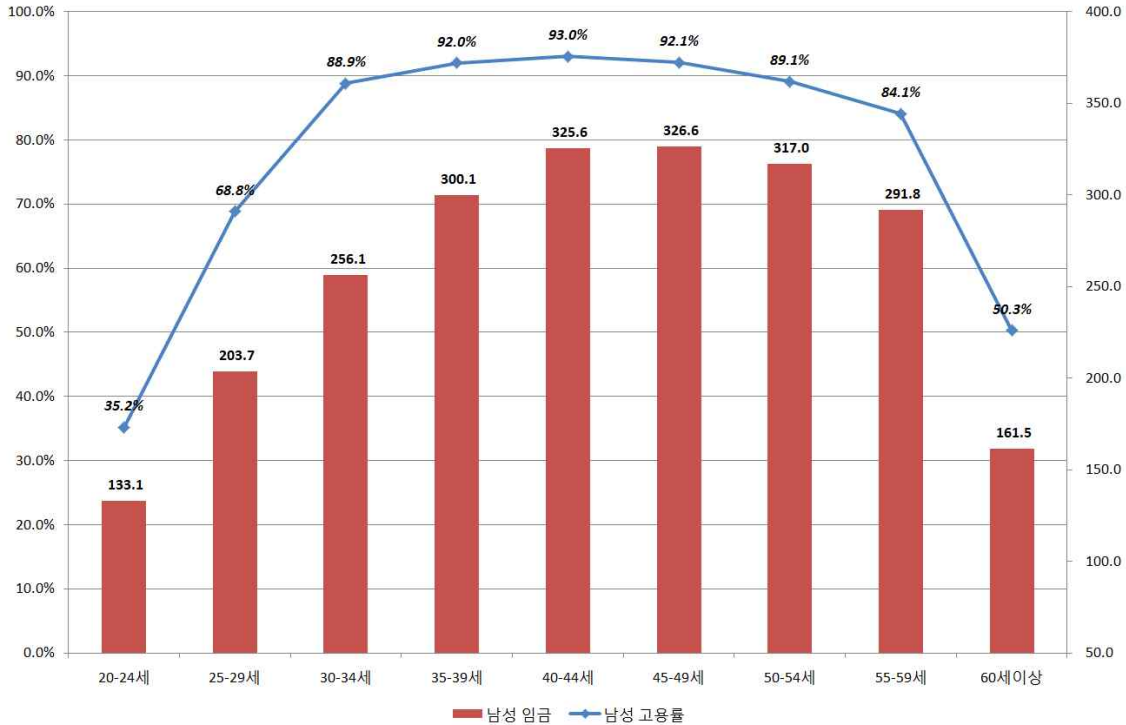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및 여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 %, 만원)



※ 고용률은 좌측 축, 임금은 우측 축 참조



[그림 3] 연령대별 남성 고용률 및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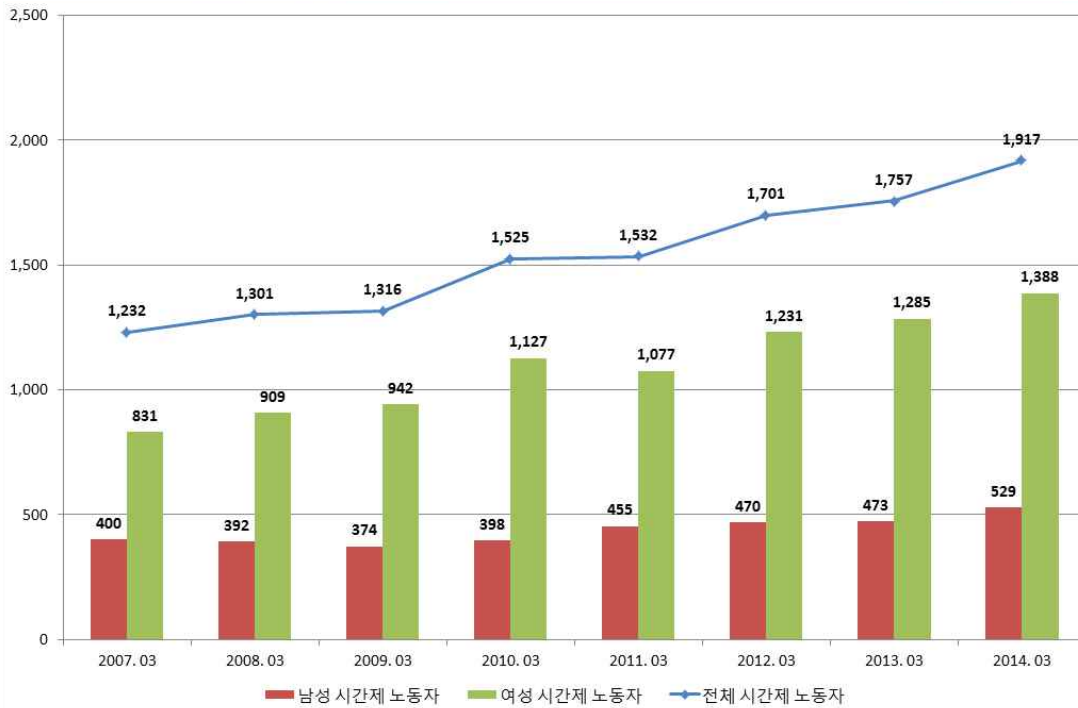
※ 고용률은 좌측 축, 임금은 우측 축 참조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도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들을 낳고 있다. 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두고 많은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를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정책을 통한 여성 노동자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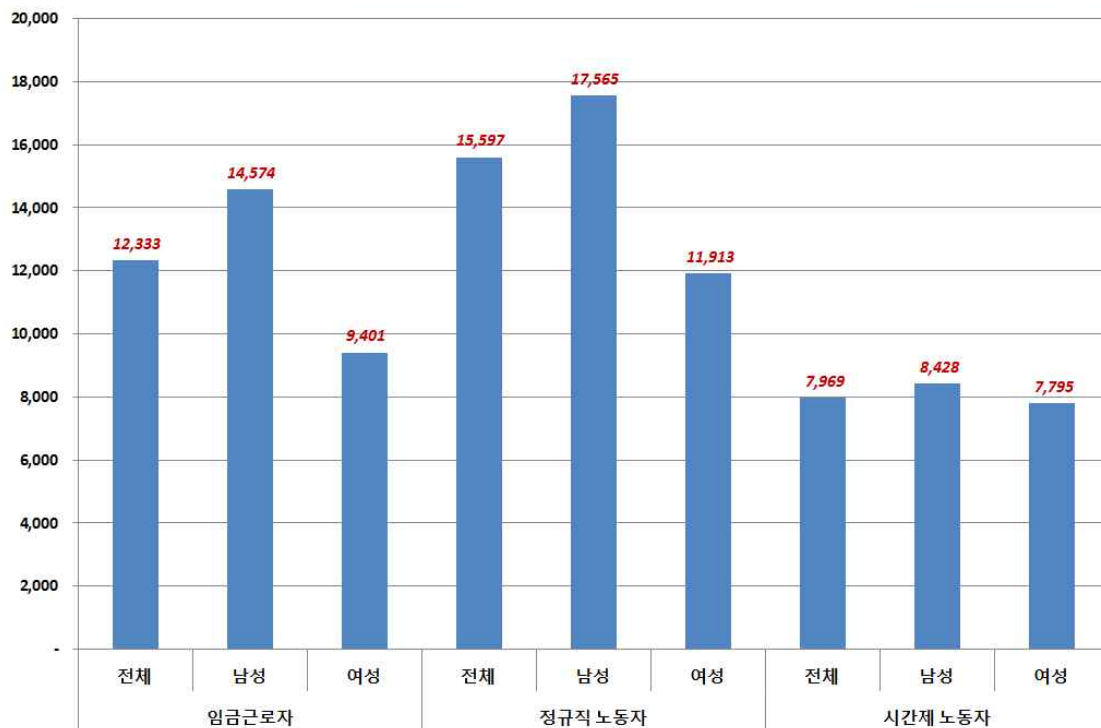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전년동월대비 16만 명이 늘어나 191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007년 3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3월 123만 2천 명이던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은 7년 동안 156%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제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 노동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3월 현재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138만 8천 명으로 남성보다 2.6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이 72.4%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의 증가 추이 (각 연도 3월) (단위 : 천명)



[그림 5]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교 (2014년 3월) (단위 : 원)



※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 시간당 임금은 주간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통해 추계함(주간노동시간을 1일간 노동시간으로 변화시켜 추계함)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이러한 시간제 노동자들은 월평균 임금은 물론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할 때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3월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천 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1만 2천 원이나 정규직 노동자 평균 1만 6천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남성 시간제 노동자들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직장지원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성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정책 추진해야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되며, 더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통해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특정 성별에 집중된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여성 취업자 확대, 여성 고용률 제고 방안이 지난 대선 스스로 비판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주력했던 이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지난 대선 기간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은 등한시한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현 정부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들도 최근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현실의 개선이 없다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아닌 단기적인 고용률 상승이라는 결과 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자체가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 복지 수준의 기반이 갖추어졌고 성별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그대로 두고, 또 현재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을 개선 없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정부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일까라는 것을 신중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7월 1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